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와 인권과제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김종효입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방정부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도시들의 사회 취약성 및 인권문제 대두

지금 세계적인 코로나19 대확산으로 많은 도시들이 방역물품과 의료인력, 병실 등이 부족하여 의료체계가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까지 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도시들의 취약한 부분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인권문제도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방역활동이 역설적으로 시민의 자유와 경제·문화적 권리 등을 제약하기도 합니다.

정부 당국은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자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고 방문시설에 대해 폐쇄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2주간 자가격리 조치하고, 모든 해외입국자도 2주간의 격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사생활 공개 등에 따른 인권침해와 시설폐쇄에 따른 경제권 제한, 자가격리로 인한 자유권 제한 등 많은 기본권 제한에 대한 이의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국가의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였고,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전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후속조치도 이뤄졌습니다.

❖ 5·18광주정신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처, 인권보호 역량 강화

중앙정부의 노력과 함께 광주시는 민주, 인권, 평화의 의미를 담은 5·18 광주정신으로 코로나19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주적이고 투명한 대응입니다. 광주시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역 의료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코로나19 대책을 함께 논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 검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감염자의 통계와 이동 동선을 시민에게

즉시 공개하여 추가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2주간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확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소외 계층에 대한 인권적 대응입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재난의 고통을 훨씬 더 크게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9차례에 걸쳐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특수고용직, 실직자 등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는 무이자 또는 낮은 금리로 경영자금을 빌려주고 있으며, 대중교통 및 상하수도 요금 등 총 9개의 공공요금을 동결하였습니다. 또 문화예술인, 실직자,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에게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마스크를 제공함으로써 감염병을 극복하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에서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모아 소외계층에 지원하였고, 건물주들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격리자 및 일반 시민들의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심리지원단」을 운영 중이며, 완치자에게는 신체·정신적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 「코로나19 온라인 후유증 극복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나눔과 연대의 대응입니다. 광주시와 대구시 두 광역자치단체는 2009년에 달빛동맹을 맺었습니다. 광주는 코로나19로 큰 위기를 맞은 대구에 제일 먼저 광주의 병실과 의료진을 제공해 ‘병상연대’라는 새로운 지역공동체 협력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광주에 확진자가 급증할 때에는 반대로 대구에서 간호사 10명을 파견해와 의료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광주시는 국내 병상연대는 물론 이웃나라 중국의 9개 자매·우호도시와도 방역구호 물품을 상호 지원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광주시 긴급의료지원단’을 모집하였는데 시민 150여명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였고, 다른 도시에서도 30여명이나 지원했습니다. 또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에게 주먹밥을 제공했던 광주의 어머니들이 이번에는 의료진들을 위해 주먹밥 도시락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이처럼 광주에는 수많은 연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광주시 공공정책 변화

광주시는 코로나19 대응과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다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인권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종 감염병 대비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광주공공의료원’을 2024년에 개원하여 음압병상 40개와 일반병상 210개를 확보하고, 광주 주변지역 주민들까지 진료받을 수 있는 ‘호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도 2023년에 개원할 것입니다.

둘째, 2045년까지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감염병이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기후위기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해 올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시는 전력부문을 100%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여 시민 모두가 녹색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녹색전환도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3천만그루 나무심기와 도시공원조성, 생활폐기물 100% 자원화 등을 통해 기후안심도시를 실현할 것입니다. 또한 청정공기 산업과 환경융합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환경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업은 100여개 시민 사회단체와 기업, 행정기관 등이 참여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셋째, 인권도시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2011년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시작된 이후, 인권연대를 향한 노력이 활발해졌지만, 상대적으로 인권연대를 통해 함께 해결해야 할 인권과제도 많아졌습니다.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인권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강고한 실천적인 인권연대가 필요합니다. 광주시는 인권관련 국제기구와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지방정부, NGO 등과 함께 인권연대를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광주시는 10여 년 동안 인권도시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고 그 경험이 쌓여 사회 전반적으로 포용적이며 인권친화적인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많은 도시 관계자분들과 끈끈한 인권연대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끝>